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3
----------	------

발의연월일 : 2024. 7. 29.

발 의 자 : 조승환 · 김성원 · 서일준
이종배 · 김장겸 · 김태호
김승수 · 이성권 · 안철수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 창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없어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상의 지원 등을 돕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및 제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
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 ----- ----- ----- -----.
1.·2. (생 략) <u><신 설></u>	1.·2. (현행과 같음) <u>2의2.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u>
3. ~ 5.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신 설>

제28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